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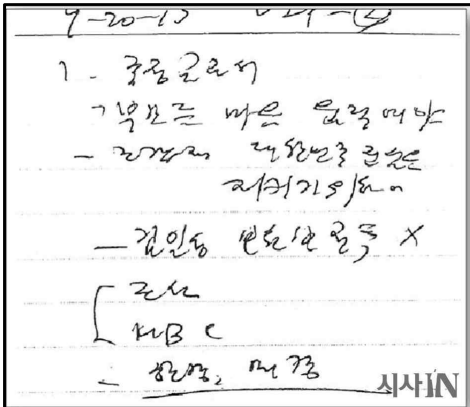
국정 교과서 청부 보도 의혹,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한다

청와대 안종범 메모, MBC에 보도지침 정황

탄핵당한 박근혜 청와대가 MBC를 자신들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도지침을 내린 정황이 드러났다. 오늘 발간된 시사IN 505호 “흔이 빠진 교과서는 이렇게 탄생했다”는 기사에 따르면, 구속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국정교과서 홍보에 MBC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첩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교과서

- 부모들 마음 움직여야
- 조감제 대한민국 진실을 지키기 위하여
- 김일성 보천보 전투 X
- 조선 MBC 한경 매경, 시민단체 부모단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알려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깨알같이 꼼꼼이 기록한 일지이다. 안 씨가 이 지시내용을 업무수첩에 기록한 날짜는 2015년 9월 20일이다. 그런데 이 직후부터 실제로 MBC는 <뉴스데스크>를 동원해 국정교과서를 옹호하는 여론몰이를 자행한다.

2015년 10월과 11월 <뉴스데스크>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던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론은 거의 전하지 않았다. 10월 15일 확정고시가 발표되고 11월 3일까지 약 3주 가까운 기간 동안 반대 여론을 전하는 <뉴스데스크>의 리포트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단신 기사 하나가 유일했다. 이같은 보도행태는 당시 노동조합이 민실위 보고서를 통해 분석, 지적한 바 있다.

실제 보도내용에서도 박근혜의 지시가 충실하게 이행된 정황이 있다. 메모 가운데 “김일성 보천보 전투 X”라는 부분은, 기존 검정교과서를 ‘친북 좌편향’으로 비판하라는 대목으로 추정된다. <뉴스데스크>는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6차례에 걸쳐 기존 검정 역사 교과서가 ‘북한 편향’이라는 주장을 반복해서 내보냈다. 검정 교과서에 김일성 주체사상이 담겨있거나 친북 사관이 담겨있다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방송했다. 6개 리포트 중에서 이에 대한 반박은 단 한 문장에 불과했다.

역사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반론을 다루려는 해당 기자들의 발제는 무시되었다. 검정 교과서 집필진의 반발이나, 역사학 교수들의 집필 거부 선언 기사는 누락됐다. 국정 교과서를 쓰는 곳이 주로 전체주의 국가들이라는 사실, 교과서 국정화가 다양한 사고를 막는다는 주장 등을 다룬 기사 송고본은 데스크 과정에서 대부분 축소, 삭제됐다. 오정환 당시 취재센터장은 편집회의에서 기자들을 “뉴스를 개인의 사상을 주장하는 도구로 쓰려 한다”고 비난하며, 다양한 여론을 전달하려 했던 기자들의 기사를 막았다.

방송법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MBC의 이같은 행태는 모두 방송법과 프로그램 준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당시 보도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보도본부장 : 김장겸 현 사장

보도국장 : 최기화 현 기획본부장

취재센터장 : 오정환 현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 박승진 현 워싱턴 특파원

사회1부장 : 김소영 현 사회1부장

김장겸 사장에게 묻는다. 당시 보도국의 보도 검열과 왜곡, 편파 보도는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나? 박근혜 청와대의 누군가로부터 국정교과서 옹호를 위한 보도 지침을 받았는가?

우리는 국정교과서뿐만 아니라, 세월호 왜곡 편파 보도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편파 보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MBC에서 벌어진 뉴스 사유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방송법과 프로그램 준칙을 위반한 당시 보도책임자들은 반드시 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현 MBC 경영진의 즉각 해임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17년 5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